

#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박 형 중\*

- I. 서론
- II. 1990년대 북한에서 확대된 시장의  
비교정치학적 이해
- III.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의 전개
- IV. 결론

## 국문요약

1990년대 북한의 시장 확대의 기본 동력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이었다. 이와 같은 시장 확대는 정치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분석될 수 있다. 정치적 자본주의란 이윤을 창출하는 특권적 기회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활동은 이미 1977년 중앙당 외화벌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대 급격한 재정악화에 직면한 북한정권은 당, 군, 정의 각종 기관들이 외화벌이와 시장 활동을 통해 예산을 자체로 벌도록 방임 또는 장려했다. 각종 기관은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업적 활동에 개입했으며, 각종 간부는 부정부패를 통해 치부(致富)했다. 가장 큰 수혜자는 군부였다. 1995년 선군정치 개시와 함께 북한의 시장은 급팽창했고, 군부는 많은 특혜를 부여받았고 기회를 활용했다. 물론 1990년대 시장 확대는 정권에 많은 도전을 제기했으며, 정권은 이에 선택적으로 강압을 통해 대응했다.

**주제어:** 정치적 자본주의, 시장화, 선군정치, 외화벌이, 무역회사

## I. 서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일종의 주류 견해가 성립해 있다. 1990년대 이래의 시장화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그리고 ‘자생적 시장화’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조금씩 달리 설명되었지만, 그 핵심은 동일했다.<sup>1</sup> 이영훈의 설명을 빌리면, “주민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상거래와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up>1</sup>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2005년 하반기호;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8); 이석·김창욱·

개인생산이 확대되는 시장화 현상”<sup>2</sup>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소비재의 생산과 유통(=시장)에 아래로부터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와 관련한 무역, 도소매, 수공업, 금융업, 시장시설, 고용형태 등에서 여러 ‘시장적’ 현상이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했다.<sup>3</sup> 이러한 아래로부터 자생적 시장화는 북한 정권이 시장 지향적 개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거나 자생적 시장화에 ‘적응’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sup>4</sup> 이러한 연구에는 공통된 설정이 있다. 즉 시장화의 주요 동력은 ‘주민(의 생계 활동)’이다. 정권의 이해관계는 시장화에 대해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에서 설정된다. 정권은 시장에 대해 마지못해 적응하거나, 통제나 규제의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은 1990년대 이래 북한경제에서 시장 확대를 이해하는데 경제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주류 견해를 형성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권력과 시장의 관계, 또는 시장이 전개하고 있는 배경을 이루는 정치 및 권력체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만큼이나 많은 것을 결과적으로 간과했다. 여기서는 북한에서 상업적 활동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개되려면 다른 독재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정권의 특혜와 보호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장은 비교(시장)사회학 또는 비교정치학에서 ‘정치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이론화되어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정권은 특혜와 보호를 정권 유지에 긴요한 기관과 협조적인 세력에게 정치적으로 배분한다. 북한에서 이러한 특혜와 보호를 누리는 상업적 행위자는 당-군-정의 각종 기관이 자체예산 충당을 위해 운영하는 외화벌이 무역회사들이다. 1990년대 초반 정권의 재정난 때문에 이와 같은 각종 기관 외화벌이가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1995년 이후 선군정치가 시작된 이후, 군부에 소속된 외화벌이 사업 단위가 상업적 활동에 관한 가장 강력한 특혜와 보호를 누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권기관의 외화벌이 회사들은 정권이 보장하는 상업적 특혜와 정치적 보호를 배경으로 독점적

양문수·이석기·김은영,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통일연구원, 2009);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한울, 2010);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2009); 정은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통일과 평화』 (장간호 2009);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통일문제연구』 2009년 하반기 (통권 52호);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1).

<sup>2</sup> 이영훈, 위의 논문, p. 26.

<sup>3</sup> 김병연도 다른 연구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한다. 김병연, “북한경제의 시장화 - 비공식화 가설 평가를 중심으로,” 윤영관·양운철 편,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와 사회』 (한울, 2009), p. 54.

<sup>4</sup>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8), p. 19.

초과이윤을 보장 받았으며, 북한의 시장 전개에서 시장지배자적 지위를 차지해왔다. 이들 정권 기관 무역회사들은 시장의 상층구조를 형성했고, 상업적 하부구조를 직접 지배하거나 또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시장적 활동과 행위자를 포섭하여 하부 구성요소로 종사시켰다. 설령 권력의 특혜와 무관하게 자생적으로 성장했다라도 정치권력의 허가과 보호, 또는 그와의 결탁 없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적 활동을 보다 오랜 기간 동안 전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만약 상업적 행위의 규모에 부합하는 강력한 허가과 보호, 결탁이 없는 개인의 상업적 행위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형사적 처벌과 몰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북한의 시장전개에서 주역은 “자연발생적인 상거래와 개인 생산에 종사하면서 아래로부터 시장확대를 추동한 (일반) 주민”이 아니라, 권력의 비호와 특혜를 배경으로 시장확대 과정에서 지배자적 지위를 누렸던 정권 기관들 및 정권과 결탁한 개인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2장에서 1990년대 북한에서 전개된 상업적 활동의 확대 또는 ‘시장화’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개념과 이론을 소개한다. 특히 ‘정치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북한에서처럼 ‘정권의 특혜와 보호에 기초하는 전개되는 상업적 활동’의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1990년대 시장 확대의 시기별 전개와 함께, 이러한 시장 확대가 정권에 제기한 도전을 서술한다. 주요 내용은 1990년대 초반의 재정위기와 기관 외화벌이 허용, 1990년대 중반 기관 외화벌이 확대와 시장팽창, 선군정치와 군부의 경제장악과 외화벌이, 1990년대 후반 규율 강화와 실리주의 모색의 시초, 1990년대 시장 확대가 정권에 제기한 도전이다. 제4장은 요약과 결론이다.

## II. 1990년대 북한에서 확대된 시장의 비교정치학적 이해

시장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현상이며,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했다. 현대에 들어서도 다양한 유형의 시장(또는 자본주의)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독재체제가 시장(또는 자본주의)과 결합해 있는 양상도 다양하다.<sup>5</sup> 이와 같은

<sup>5</sup> 독재체제와 시장 결합의 여러 유형에 관해서 Daniel Buhr, “Varieties of (Incorporated) Capitalism: Conceptualizing Governance and State-Business Relations in Autocracies,” *Paper presented at IPSA-ECPR Conference, Sao Paulo (February 19, 2011)*; H. E. Chehabi and Juan J.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pp. 21-23.

다양한 시장(또는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개념과 이론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다.

여기서는 1990년대 북한에서 확대한 시장 유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먼저 Mancur Olson이 제기한 ‘자생적 시장’과 ‘사회적으로 고안된 시장’의 개념을 소개한다. 한국의 기존 연구에서 곧잘 등장하곤 했던 ‘자생적 시장’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은 Olson의 개념 쌍을 참고하여 그 의미가 가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James Scott의 전개한 논리를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지향된 자본주의’와 ‘생산적으로 지향된 자본주의’라는 두 개념을 소개한다. 1990년대 북한 시장을 특징화할 수 있는 것은 ‘자생적 시장’과 ‘정치적으로 지향된 자본주의’ 개념이다.

Mancur Olson은 자생적 시장과 사회적으로 고안된 시장을 구별한다. 교환이 주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자생적 시장은 어디에서나 존재했으며 불가결하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는 계약준수와 소유권 보장에 대한 안정된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다. 따라서 계약 파기가 발생하기 어렵거나 파기 되더라도 피해가 크지 않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즉 교환은 당사자가 동시에 참여한 상태에서 한 장소에서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가족이나 친척 등 좁은 사회적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장의 이득은 그리 크지 않았고 따라서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고안된 시장은 사회가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에만 등장했다. 이러한 시장에는 참여자가 다양하며,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도 다양하다. 이러한 시장은 경제번영을 가능하게 했다. Olson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안된 시장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즉

“상업이 발생시키는 모든 이익을 실현시키자면, 다음과 같은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법체계와 정치질서가 필요하다. 즉 계약실행을 준수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며, 대부금 협약을 실행시키며, 유한회사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투자와 대부가 원활하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광범하게 활용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내는 그러한 법체계와 정치질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들은 상당 기간 존속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sup>6</sup>

이와 같은 법체계와 정치질서와 함께 세련되고 복잡한 시장이 출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을 비롯한

<sup>6</sup> Mancur Olson, *Power and Prosperity: Outgrowing Communist and Capitalist Dictatorship* (New York: Basic Books, 2000), p. 185.

발전된 민주주의 시장경제에는 이러한 것들이 구비되고 보장되어 있다. 통상적 의미에서 시장경제라고 하면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고안된 시장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에서 결여된 것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법체계와 정치질서,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권리보장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시장전개와 관련하여 법체계와 정치질서,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권리 보장에 관한 상호관계와 전반 상황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James Scott의 개념을 빌어 정치적으로 지향된 자본주의(politically oriented capitalism: 이하 정치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Scott는 정치적 자본주의와 생산적으로 지향된 자본주의를 구별한다.<sup>7</sup> 정치적으로 지향된 자본주의는 그 개별적 형태가 어찌되었건, 이윤을 창출하는 특권적 기회를 국가가 관리하는 상업적 활동을 지칭한다.<sup>8</sup> 생산적 자본주의는 팔릴 만한 상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기초한다. 정치적 자본주의에서 통치자는 경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며, 상업적 활동에 대한 허가권을 관장하고 독점권을 부여한다. 국가 또는 정권은 상업 활동에 대한 허가권과 독점권을 정권유지라는 정치적 기준에 따라 편파적으로 배분한다. 한편 그 반대 급부로 정권의 재정확충을 위한 수수료, 사례금, 특별 세금을 받거나, 정권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낸다. 이러한 체제에서 상업적 이윤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하는 통치자가 정권 유지라는 관점에서의 정치적 재정적 기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며, 관세, 간접세, 독점권 부여와 같은 변수를 어떻게 조작하는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규제, 단속, 몰수, 추방과 같은 행정명령과 노골적 강제를 어떻게 동원하며 참여 주체별로 상업 활동에의 참여 기회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조절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정치적 자본주의에서는 Max Weber가 말한 현대자본주의의 근본 특징인

<sup>7</sup> James C. Scott,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Englewood Cliffs: 1972), pp. 49-52; 원래 ‘정치적 자본주의’는 Max Weber로부터 기원한 개념이다. Weber는 가산제적(patrimonial) 자본주의, 약탈품(booty) 자본주의 등의 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자본주의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제와 결합한다. 이와 개념을 설명하거나 응용한 서술로 다음을 참조. Paul D. Hutchcroft, *Booty Capitalism: The Politics of Banking in the Philippin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Thomas M. Callaghy, “The State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Africa: Theoretical, Historical and Comparative Reflections,” Donald Rotchild and Naomi Chazan eds., *The Precarious Balance: State-Society Relations in Africa* (Boulder: Westview Press, 1988); Oliver Schlumberger, “Patrimonial Capitalism: Economic Reform and Economic Order in the Arab World,” Eberhard-Karls University Ph.D. theses (2004); Stanislav Andreski, *Max Weber on Capitalism, Bureaucracy and Religion* (London: Routledge, 2006).

<sup>8</sup> Scott, *Ibid*, p. 52.

관료제와 법치에 바탕한 ‘기계처럼 정확한 계산가능성(예측성)’이 존재하지 않는다.<sup>9</sup> 여기에서는 계약준수에 대한 보장이 존재하지 않고 소유권이 불분명하며, 조세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규제가 해마다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알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 관료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소지가 커진다. 이처럼 위험요인이 충만한 상황에서 개인 사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상업적 재능만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뇌물 공여를 통해 정권 또는 관료를 친구로 삼아 자의적 차별, 강탈 또는 몰수를 회피할 수 있는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재능이다. 다시 말해 상업적 활동에서 성공하자면 생산물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 보다는 관료적 후견망의 품질을 개선하여 특혜적 사업권을 따내고 독점권을 보장받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막을 확충하는 것이다.<sup>10</sup>

결국 정치적 자본주의에서는 상업적 활동을 통해 이윤을 내고 자본축적을 하자면, 정권 또는 국가기구와 결탁하면서, 그것이 제공하는 특혜와 보호를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자본주의에서 사업가는 정권 관료 그 자신이거나, 또는 정권 관료와 결탁한 사업가들이다. 이러한 정치적 자본주의에서는 부패가 만연하며<sup>11</sup> 계약준수, 소유권, 조세수준, 정부규제 등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의도적으로 유지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을 향유한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sup>12</sup> 법치가 존재하지 않고 제도가 기능하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경제적 경쟁력 대신에 정치적 차원에서 특혜적으로 사업기회를 배정할 수 있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 힘 있는 자가 완력으로 또는 공권력을 남용하여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치적 자본주의 개념, 다시 말해 “이윤을 창출하는 특권적 기회를 국가가 수여하는 시장 활동”의 개념과 위에 서술된 정치적 자본주의의 여러 특성

<sup>9</sup> Hutchcroft, *Ibid.*

<sup>10</sup> 중국의 경우에 대한 서술로서, David L. Wank, “Private Business, Bureaucracy, and Political Alliance in a Chinese City,”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r. 33 (January 1955); Ole Bruun, “Political Hierarchy and Private Entrepreneurship in a Chinese Neighborhood,” Andrew G. Walder,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Economic Origins of Political Decline in China and Hung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sup>11</sup> 부패 유형과 정치권력의 남용, 그리고 재부 축적에 관하여 그리고 특히 북한과 같은 사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서술은 Michael Johnston, *Syndromes of Corruption: Wealth, Power,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p. 155-185.

<sup>12</sup> Konstanin Sonin, “Why the Rich May Favor Poor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William Davidson Working Paper Number 544* (December 2002).

은 1990년 북한에서의 시장 확대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이미 1977년 중앙당 외화벌이가 시작된 이래로 각종 정권 기관은 외화벌이용 상업적 활동에 개입해 왔다. 이러한 각종 정권 기관의 활동은 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보장되고 보호되는 특권적 상업적 기회이자 독점권이라 할 수 있었다. 1990년대 북한 정권이 재정난이 극도로 악화되자, 대부분의 당-군-정 기관에게 자체로 예산을 벌어들이기 위한 상업적 활동이 허용되고 장려되었다. 이들 각종 정권 기관들은 기관 차원의 자산, 인원과 공권력, 그리고 국가로 부여된 특혜적 영업권과 무역특권을 토대로 시장활동에 개입했다. 일반 주민이 시작한 생계형 상업활동과 비교할 때, 이들 정권 기관은 절대적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었으며, 사실상 후자가 대부분의 전자를 상당부분 자기 영역 내에 포섭하고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하 3장에서는 1990년대 북한에서 전개된 시장확대 또는 정치적 자본주의의 전개를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절은 1990년대 초반의 재정위기와 기관 외화벌이 허용, 2절은 1990년대 중반 기관 외화벌이 확대와 시장팽창, 3절은 선군 정치와 군부의 경제장악과 외화벌이, 4절은 1990년대 후반 규율 강화와 실리주의 모색의 시초, 5절은 1990년대 시장 확대가 정권에 제기한 도전이다.

### Ⅲ.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의 전개

#### 1. 1990년대 초반의 재정위기와 기관 외화벌이 허용

이미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북한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일련의 대내외적 경제 충격으로 더욱 악화된다. 그 핵심은 구 소련 및 중국과의 우호적 무역관계의 붕괴이다.<sup>13</sup>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은 전년과 비교할 때, 1991년 38%, 1994년 20.6%, 1998년 33.8% 감소했다.<sup>14</sup> 북한의 원유 도입은 1991년 189만 톤에서 1994년에 91만 톤, 1999년 31.7만 톤까지 감소하여 최저점에 도달했다.<sup>15</sup> 국민소득, 무역, 재정, 그리고 원자재 공급 등 주요 경제지표들은 1998년까지 계속 하락했다.<sup>16</sup> 북한 체제의 경제적 근간을 이루어 오던 국가 계획체제와 국가 식량배급

<sup>13</sup> 이석 외,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통일연구원, 2009), p. 92-93.

<sup>14</sup> KOTRA 북한팀,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KOTRA, 2004), p. 7.

<sup>15</sup> 이후 완만한 증가 또는 정체로 2007년은 52.3만톤이다. KOTRA, 『2007년의 북한의 대외무역동향』(KOTRA, 2008), p. 20.

<sup>16</sup> 한국은행, 『북한 GDP 관련 통계』, <www.bok.or.kr> (검색일: 2011.4.15).

체계가 1993-4년경에 이르면 사실상 붕괴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유기업 가동률은 20-30%로 평가되었다.<sup>17</sup> 이는 국유기업에 대한 조세부과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이 붕괴한 것을 의미했다.<sup>18</sup> 북한당국이 발표한 재정규모는 1957년 이후 199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sup>19</sup> 그런데 1995년의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8.4% 규모로 발표되었다. 그 후 1997년에 최저점에 도달한 후, 2002년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그렇지만 2002년의 명목상 예산규모는 1994년의 53.4%에 불과했다.<sup>20</sup>

이와 같은 상황전개에 대해 북한당국은 1992년 화폐개혁 조치를 통해 국가재정을 강화하는 한편,<sup>21</sup> 각급 기관과 기업소가 자체로 외화를 벌어들여 운영예산을 마련하고 배급을 해결하라고 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1991년 ‘새로운 무역체계가 도입되었다.’<sup>22</sup> 이 조치는 대외경제위원회 뿐 아니라 “생산을 담당하는” 내각의 각 부서와 지역 행정단위인 도 단위가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었다.<sup>23</sup> 그런데 이 조치 이후 당, 정, 군의 거의 모든 기관은 자체로 무역회사를 조직하여 외화벌이에 나섰다.<sup>24</sup> 외화벌이는 국가와 당의 주요 기관 및 지역단위별로 조직된 외화벌이 사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와 중공업부, 경공업위원회, 화학부, 국가체육위원회, 당기관 중에서는 중앙당의 39호실, 제2경제위원회, 중공업부, 사로청이 참가했다. 이밖에도 중앙인민위원회, 사회안전부, 인민무력부, 평양시당 등이 각각 한 개에서 수개의 외화벌이 무역회사를 운영했다. 아울러 개별 기관, 기업소들과 지방기관들도 각기 자기 무역회사를 차리고 무역에 나섰다.<sup>25</sup> 이들은 대외무역을 통해 원자재와 식량을 해결하도록 요구받았다.<sup>26</sup> 지

<sup>17</sup> 한국은행 ‘북한 GNP 추정 결과’에 따른 김영운의 계산. 김영운, “북한에너지난의 실상과 전망,”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37.

<sup>18</sup> 고일동,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4-09, pp. 17-21.

<sup>19</sup> 위의 책, p. 20. 고일동은 공장가동률이 1990년 초부터 현저히 저하했던 것 그리고 공산품에 대한 조세를 기본으로 하는 재정구조를 고려할 때, 공장가동률 저하보다 더 빠른 속도로 1994년 이전에 이미 세입이 현저히 감소했을 것으로 본다.

<sup>20</sup>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한국은행, 2004), pp. 12, 58. 2002년 7월에 시행된 경제관리개선 조치는 물가와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한편, 주민생활보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현저히 감소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이후 북한당국은 2003, 2004년 예산 규모를 발표하지 않았다. 2005년에 발표한 예산규모는 2002년의 15.8배였다. 박형중·최진욱, 『최고인민회의의 11기 3차 회의 결과 분석』 (통일연구원, 2004), p. 16.

<sup>21</sup>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pp. 35-38.

<sup>22</sup> 리신호,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 (1992).

<sup>23</sup>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pp. 133-136.

<sup>24</sup>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해남, 2004), pp. 122-125.



방정권 기관들은 지방의 특산물을 중국에 수출하고 원자재와 식량을 수입하여 분배하기도 했다. 지방 정권기관은 과거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서 남는 부분의 일부를 중앙에 납부했었지만, 이제는 먼저 중앙 납부 몫을 정하고 남는 것을 지출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기관의 밀수가 증가했다.<sup>27</sup>

1990년대 전반기를 보면, 사실상 당, 군, 정 의 거의 모든 기관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내다파는 방식의 외화벌이를 위해 동원되는 양상이 나타난다.<sup>28</sup> 주요 외화벌이 수출 품목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우선 자연 채취물이었다. 즉 사금, 아연, 철광석, 석탄 등 광산물, 송이, 고사리, 오미자, 목재 등 산나물과 임산물, 조개, 명태, 명란, 성게알, 해삼, 실뱀장어 등 수산물이었다. 또한 토끼, 고양이, 물쥐 가죽, 오리털 등도 수집되었다. 또 하나의 주요 품목은 파철이었다. 파철 수집을 위하여 많은 공장들에서 멀쩡한 기계가 뜯겨 나갔다. 학교, 인민반, 기업소에게는 파철 수집 할당량이 배정되었다. 이 시기 당, 정, 군의 주요 기관이 취급한 수출품에는 골동품, 아편, 가짜 담배, 중고 자동차도 들어 있었다. 이는 범죄성 사업에 공공기관과 그 외화벌이 사업체가 관여했음을 의미했다. 골동품의 수집과 수출에도 당, 정, 군 산하 외화벌이 무역회사가 관여했다. 1992년 김정일 지시 이후로 양귀비 재배와 가짜 담배 생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정무원, 39호실,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 시도행정기관 등은 아편의 재배와 가공에 참여했다. 가짜 담배 생산에도 국가기관이 관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본도 참가하여 대중국 수출용 생산으로 발전하였다.<sup>29</sup> 일제 중고 자동차를 수입하여 중국으로 밀수출 하는 일에는 당, 내각, 군, 보위부, 보안서 등 당-정 기관이 주도적으로 참가했다.<sup>30</sup> 특히 보위부와 보안서가 핵심 역할을 했다. 중고 밀매는 함북도 국경 지역과 중국 연변 및

<sup>25</sup> 1990년대 초반 북한 무역회사의 명칭과 소속, 취급품목에 대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무역제도 및 상사디렉토리』(무공자료 1994-70).

<sup>26</sup>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한울, 2010), pp. 419-429.

<sup>27</sup>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삼성경제연구소, 2008), pp. 83, 118-124. 밀무역은 세 가지 종류로 대변되었다. 첫째, 북한측으로부터 중국(연변)으로의 자동차, 담배 등의 밀수출(전매), 둘째, 신의주-단동 간 북한측 유색금속 및 약재와 중국측이 식량 교환, 셋째, 북한상인들의 중국 상품 밀수입이다. 규모가 커지면, 국경경비대의 묵인 또는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

<sup>28</sup> 주로 탈북자의 증언에 의거함.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pp. 122-125

<sup>29</sup>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2006), p. 301.

<sup>30</sup> 중국 측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다른 해에는 전혀 없거나 많아야 30만 달러 수준인데, 1993년과 1994년에만 5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연변주 대외무역합작국 통계자료, 황덕남, 『북한 연변 변경무역의 활성화에 대하여』, 『통일문제연구』, 2000년 하반기호(통권 34호), p. 50에서 재인용.

단동-신의주 사이에 흥하였다.<sup>31</sup> 한편 이시기 북한과 연변 사이의 무역이 급성장했다. 기존의 상업적 관계에 더하여 북한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조선족의 북한 내 친척 돕기가 증가한 이유가 컸다. 연변과의 무역을 통해 옥수수를 비롯한 각종 식품류가 북한에 유입되었고, 철강, 해산물과 목재가 중국에 수출되었다. 무역액은 1990년 2459만 달러이던 것이 1993년 3억2337만 달러, 1994년에는 2억2615달러가 되었다. 1995년에는 구매력 저하로 5511만 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sup>32</sup>

## 2. 1990년대 중반 기관외화 벌이 확대와 시장팽창

국가배급 중단이 확실해진 1990년대 중반 이후 기관, 기업소의 외화벌이는 극적으로 확대되었다. 외화벌이에 나서지 않은 공장, 기업소, 기관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 통제해야 할 보위부, 검찰, 보안서는 물론 노동당 지방 기관들도 각종 외화벌이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그 촉매가 되었던 것은 기관, 기업소 차원에서 식량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라는 1994년의 지시였다.<sup>33</sup> 이러한 정책선언은 국가배급 체계로부터 ‘기관, 기업소 배급 체계’로의 전환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 다름없었다. 이와 함께 기관, 기업소가 자력갱생을 위해 시장과정에 참가하는 것이 사실상 공식 목인되었으며, 이는 시장팽창, 부정부패, 개인축재 등을 가속화시켰다. 기관기업소 배급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즉,

기관기업소 배급이란 정부가 국가가 아닌 기관, 기업소 단위별로 성원들의 식량배급 규정량 현물을 확보하는 경제활동을 허용한 일종의 소집단적 배급형태이다. 즉 국가가 승인한 소여 규정량과 구입활동 범위 하에서 소여 단위 스스로가 마련한 자금과 운송수단, 토지, 농자재 등을 운용하여 상업적 혹은 농경적 방법으로 소속 종업원에게 공급할 식량 현물량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의 배급 독점권이 하부 소단위에 이양된 분권적 형태로서 전인민적 소유 개념보다 등급이 낮은 소집단적 소유 개념이 실지로 작용하였다.<sup>34</sup>

이와 같은 기관기업소 배급 형태로서 1990년대 후반기에 등장한 것이 이른바 “쌀실이”였다.<sup>35</sup> 이는 기관이나 기업소가 자체로 마련한 자금과 수송수단, 양정국

<sup>31</sup> 자동차 밀수출은 1990년대 초반에 시작하여 2000년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 305.

<sup>32</sup> 황덕남, “북한 연변 변경무역의 활성화에 대하여,” 『통일문제연구』, 2000년 하반기호 (통권 34호), pp. 47-48.

<sup>33</sup>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p. 420.

<sup>34</sup> 채순, “개인소유의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왔나?,” 『임진강』, 9호 (2010), p. 93.

의 식량공급지도를 가지고, 무역항이나 국경지역으로 가서 국가무역기관으로부터 “쌀”을 구매하고 수송하여 종업원에게 배급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서 식량매입 자금과 출장 경비는 부자로부터의 용자, 기업재산의 매각 그리고 식량 일부의 시장판매를 통해 조달되었다. 이러한 ‘쌀실이’의 의미는 두 가지였다. 첫째, 기관(기업소)가 식량조달을 위해 자체 자금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었다. 둘째, ‘쌀실이’는 식량의 시장판매를 사실상 합법화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식량조달의 주체는 개별 기관, 기업소이며, 자금 동원과 수송 및 분배의 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간부(지배인과 당비서)와 주변의 권력기관(당기관, 행정기관, 보위부, 안전부 등)에 의한 횡령과 강탈이 매우 용이했다.<sup>36</sup>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한 식량의 운송 및 분배과정도 ‘쌀실이’의 경우와 거의 유사했다.<sup>37</sup> 빼돌린 쌀의 일부는 뇌물로 사용되거나 개인축재를 위해 장마당으로 흘러들었다.

일반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장사에 나서게 된 것은 식량배급이 중단된 1993년 1994년경이었다.<sup>38</sup> 그 이전까지는 장사에 대한 통제가 심했을 뿐 아니라, 또한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장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시장주의적 보수적 인식이 강했다.<sup>39</sup> 그러나 배급 중단과 아사위협이 전면 가시화된 1994년 이후 일반 주민의 시장참여가 급격하게 팽창했다.<sup>40</sup> 그 배경과 양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식량 배급 중단 및 가동률 저하에 직면한 기관 기업소가 자력갱생을 위해 묵인된 계획외적 활동이 1990년대 중반 들어 본격화했다. 각종 기관의 온갖 형태의 외화벌이, 각 지역 및 기관끼리의 물물교환 등 지역별, 기관별 자구책을 강구했다. 기관 기업소의 자구책 마련 과정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간부와 기관이 공적 지위와 권한을 활용하여 공공 재산을 횡령하고 유용할 수 있는 기회가 현격히 증가했다. 이를 통해 대량의 자재와 식량이 시장으로 빼돌려졌다. 주민들은 공식 직장에 나가는 대신 장마당에서 부업 위주로 생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은 일반주민이 장마당에서 생필품(공업제품)과 세간 등을 식량과 바꾸는 것, ‘식량 구

<sup>35</sup> 림근오, “2000년 예산 비사검열과 그 잘못,” 『임진강』, 7호 (2010), p. 22.

<sup>36</sup> 종은벳들 엮음,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정토출판, 2000), pp. 78-82.

<sup>37</sup> 위의 책, pp. 78-82.

<sup>38</sup> 위의 책, p. 138.

<sup>39</sup> 최봉대·구갑우, “북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 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1950-198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6권 2호.

<sup>40</sup>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pp. 127-132;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향,”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6), pp. 105-141.

하러 다니기' 위한 주민의 지역 간 이동 등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sup>41</sup> 노동자는 공장 물건을 훔쳐 팔거나, 장사 등의 수단으로 공장노동 바깥에서 호구지책을 마련했다. 절도, 강도, 매춘, 밀수 등 범법행위도 증대하기 시작했다. 농민시장이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공산품 거래가 증가되었고 상설 시장화되었다. 지방정부는 농민시장을 묵인하면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 목적은 장마당의 무질서한 확산을 차단하며, 장사꾼들을 원활하게 통제하는 한편, 장세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장마당은 철도 교통이 발달한 국경도시에서 특히 번성하였다. 이에선 신의주, 만포, 혜산, 무산, 회령, 온성 및 라선시가 있었다.<sup>42</sup>

### 3. 선군정치와 군부의 경제장악과 외화벌이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5년부터 '선군정치'가 시작되었다. 김정일은 이제까지 핵심 권력 기관이던 당을 대신하여 군부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아울러 김정일은 국가 경제의 운영권을 사실상 군부에게 맡기는 한편, 군부에 막대한 무역특권을 부여했다. 군부는 주요 각종 사회간접 국책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돈이 될만한 사업은 무엇이든 '덮쳤고,'<sup>43</sup> 일부 협동농장, 철도, 공장, 기업소를 내각으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운영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자체예산 충족을 명분으로 한 군부의 외화벌이가 규모가 현저하게 증가했다. 즉 1990년대 중후반까지 북한에서 외화벌이라는 것은 거의 인민무력부가 권한을 이용하여 외화벌이가 될 만한 것은 모두 관여하면서 수출용 자원을 독점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sup>44</sup> 그런데 이런 외화벌이는 자연에서 채취되는 광물이나 식물을 주 대상으로 하면서 기술적 안목도 없는 상태에서 단기성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원을 낭비하고 자원 원천을 붕괴시키곤 했다.<sup>45</sup>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에서 서술하겠지만, 군부가 이처럼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당과 정부가

<sup>41</sup>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1998), pp. 6-24.

<sup>42</sup> 최봉대·구갑우, “북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 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1950-198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6권 2호; 림근오, “2000년 혜산 비사검열과 그 잘못,” 『임진강』, 7호 (2010), p. 38.

<sup>43</sup>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 302.

<sup>44</sup> 위의 논문, p. 302.

<sup>45</sup> 예를 들어, 일정하게 자란 나무만 베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무까지 모조리 베어버린단든지, 송이를 남획하여 내년도 송이의 씨를 말린단든지 이다. 이런 외화벌이에는 죄수나 군인 등이 강제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현저히 취약해진 상태에서 군부가 정권 유지의 근간이 된 것에 대한 포상이다.<sup>46</sup> 둘째, 군대의 인적 물적 자원과 강압을 동원하여 경제난 속에서도 최소한의 경제 인프라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특히 군수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군부 외화벌이를 통해 보급을 개선하여 병사의 영양실조와 탈영 및 비적화와 같은 군대의 와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sup>47</sup>

이로부터 북한의 경제와 무역은 군부의 생존을 위해 군부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군부는 1996년 말부터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운수, 체신, 철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각 부분에 군을 투입해 경영을 장악하고 관리 통제했다.<sup>48</sup> 1997년에 김정일은 “군대가 직접 책임지고 농사를 지을 데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 이 명령에 따라 군부대가 협동농장을 관리하고, 농작물 도난을 방지할 목적으로 옥수수 등 곡식이 익기 시작하는 8월부터 탈곡시기인 12월까지 각 농장, 탈곡장에는 4~5명의 무장보초가 세워졌다. 군부가 ‘자체로 전투준비’ 즉 ‘양피와 연유’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으로 김정일로부터 부여 받은 무역특권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의 하나는 대일본 수산물 워크(무역권)였다.<sup>49</sup> 군부의 주요 기관들은 주요 항구도시에 외화벌이 수산물 원천 기지와 지사를 설립했다. 수산물 채취와 유통을 담당하는 지사의 작업은 원래 산하 군부대가 담당해야 했다. 그러나 군부대의 외화벌이 생산 체계는 붕괴되어 있거나, 자금과 인력의 동원, 납기 및 품질 준수, 국제적 무역 절차의 준수 측면에서 경직된 군대행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산물 원천기지는 군부 무역기관의 산하 기관의 간판을 달고 있지만, 민간업자의 개인 기업에 의해 운영되었다. 개인업자는 자체로 자금을 동원하고 인력을 고용하며 수출 실무를 수행하는 대신, 일정액을 해당 군부대에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을 가졌다.<sup>50</sup> 이러한 방식의 결합은 군부에게나 민간업자에게나 이익이 되는 결탁이었다. 즉,

<sup>46</sup>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하신 말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6돌 즈음 담화 (1996.12.7),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2004).

<sup>47</sup> 북한 군대 보급은 1980년대 중반부터 악화했다. 보급악화가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 군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최주환, “북한군의 후방사업이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1권 2호, pp. 37-65; 권혁, “1990년대 후반 군대 기강 문란 현상에 대해서,” 『고난의 강행군: 98년 가을 - 99년 봄 30살 청년의 북한답사기』 (정토출판, 1999).

<sup>48</sup>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pp. 163-164.

<sup>49</sup> 채순, “개인소유의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왔나?,” 『임진강』, 9호 (2010, 가을), p. 103.

<sup>50</sup> 주성하, “북한에서 수산물 수출 외화벌이의 역사와 전개에 대하여,” 『북한 바로보기』, 2010 경천, pp. 7-28.

(어촌의 수산물 민간업자)들은 무역일꾼들을 내세워 일본 바이어를 찾았고, 뒤를 봐줄 만한 배경을 찾았다. 배경으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군부였다. 민간은 노동당 지도를 받아야 하고 행정기관 간섭을 받아야 하고 보위부, 검찰, 보안성 등 온갖 곳의 트집에 시달려야 했다. 반면 군부는 위선만 뇌물로 삶아 놓으면 간섭하는 데가 별로 없었다. 바이어를 확보한 (민간업자)들은 군단장 등 해당 지방 군사령관을 찾아갔다. “저희에게 인원을 좀 대주고 명칭만 허락해 주면 매달 수 십 만원씩 바치겠습니다.” 군부에 이견 생각지도 않은 공돈이 굴러오는 일이었다. 명칭 빌려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도 않고 동원할 군인들은 무진장이었다. 이를 허락하면 부대 부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막대한 뇌물을 챙길 수도 있었다.<sup>51</sup>

한편 군부 상층 각급 기관의 무역회사와는 별개로, 군대 하부 단위도 상업적 활동에 개입했다. 그 목적은 동일했다. 자체로 자금을 확보하여 부대 운영에 필요한 식량과 군수물자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군대의 하급 단위가 스스로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사병들을 건설 또는 탄광 등에 파견하여 외부 품팔이 시키는 것이었다.<sup>52</sup> 예를 들어 어떤 대대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업지에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여 팔아먹는 계획을 세운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기관 간부에 뇌물을 주거나 공모를 통해 토지의 용도변경을 받아내고, 돈주의 자본을 동원하며, 사병들을 노동자로 활용한다. 건설이 끝나면, 완성된 주택의 일부가 부대 몫으로 배정되어 판매된다. 이 수입 중에서 일부는 부대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는 기본으로 3인 즉 대대장, 정치지도원, 보위지도원이 나누어 가진다. 그 다음의 사례는 개인탄광에 군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군부대는 스스로 연료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폐광 등에 대해 채탄 허가권을 받는다. 군부대는 자본이 있고 경영과 장사에 능한 민간인을 자체 탄광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지배인은 사병을 이용하여 탄을 캐고 군트럭으로 운반하여 탄을 장마당에서 판매한다. 그 수익의 일부는 동원된 사병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지휘관들 사이에 분배된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군대의 외화벌이 기관이 내각 소속 기업에 자금을 ‘임가공’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거나, 아예 기업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이는 내각에 비해 비교적 풍부한 자금을 가지고 당 산하 외화벌이 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외화벌이 기업은 내각 산하 기업에 자금과 물자를 제공하여 생산한 후 수출하

<sup>51</sup> 위의 책, p. 15.

<sup>52</sup> 탈북자 면접(2009).

여 그 수입의 일부를 기업에 제공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은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하는 시기임과 아울러 군부가 주역으로 등장하는 선군정치의 개막 시기이기도 했다. 이 시기 시장의 개인상인과 군부는 상호 공생했다. 개인 상인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의 후원과 보호 없이 독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했다.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역쿼터(와크)가 필요했고, 수출원천을 확보해야 했고, 운송수단이 필요했다.<sup>53</sup> 이 세 가지 모두를 선군정치 시대의 주역인 군부가 해결해 주었다. 군부는 대량의 와크를 확보했으며, 해안경비 책임으로 인해 해안선을 장악하고 있었고 광산물에 관한 수출 권한을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자체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었으며, 또한 다른 기관에 비교할 때 운송수단의 측면에서도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다가 군부는 사실상 독립적 사법권(“인민무력부 핵우산”)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부의 간판을 달고 장사하는 경우, 다른 권력 기관으로부터의 방해와 약탈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따라서 선군정치 시기 장사꾼들이 군부의 보호막을 찾아 대거 이동하였다. 이는 군부의 입장에서 결코 싫은 것이 아니었다. 군부는 어차피 자체로 운영예산을 벌어야 했지만, 군부 자신만으로는 그에 대한 자금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군부는 민간업자와 결합하여, 이들에게 일정 수입을 납부하게 하는 대신, 군부 회사의 간판을 달고 수출품의 생산과 수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군부와 군부 단위이다. 현실적으로 군부 내에서도 각 기관별로 별개의 무역회사가 존재하며, 그 무역회사가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1990년대 들어서 비로소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80년대부터 당, 군, 정의 주요 권력기관은 자체 예산확보를 위해 각종 명목으로 외화벌이 사업을 진행했다. 군부의 경우도 외화벌이 목적은이 각 군대단위는 외화벌이를 통해 자체 예산을 마련하여 식량의 구입하여 사병들의 대량 아사를 방지하며, 부대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설비와 자재를 구입하는 것이다.<sup>54</sup> 군대 단위의 무역회사 명칭 및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는 시기마다 변동이 있었고 빈번하게 통폐합이 있었다. 1996년 이전 경, 군부의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외화벌이 회사의 숫자는 30여 개에 달하였다.<sup>55</sup> 주요 기관의 무역회사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sup>56</sup> 인민무력부는 매봉총회사,

<sup>53</sup> 채순, “개인소유의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왔나?,” 『임진강』, 9호 (2010, 가을), p. 103.

<sup>54</sup> 최주환, “북한군의 외화벌이 실패와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2권 2호, pp. 38-39.

<sup>55</sup> 정보사령부, 『북한조직편람』 (2004.2), p. 638.

총참모부는 강성총회사, 적공국은 칠보무역회사, 정찰국은 비로봉무역회사, 호위사령부는 청운산무역회사, 총정치국은 백로무역회사, 평양방어사령부는 백양무역회사, 보위사령부는 수정무역회사 등등이다. 이들 각 군부 산하 무역회사의 수입은 군부 전체로 통합되고, 군부 전체의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군부의 각 기관은 군부의 전반적 발언권과 이권 배당이 증가하는 데에서는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외화벌이는 개별단위로 개별 단위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었다. 선군정치 시기, 시장 확대의 과정에 참여하여 가장 큰 이익을 본 것은 군부의 개별 단위들의 외화벌이였다. 개별 단위의 외화벌이는 기본적으로 그 단위에 소속되고 그 단위의 운영예산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군수공업의 발전은 군부 일반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개별 군부 단위의 외화벌이가 반드시 군수공업의 유지와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 이래의 이러한 실제 상황은 사후적으로 1998년 헌법에서 국방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합법화되었다. 국방위원회는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된 국방(안보) 문제에 대한 최고정책결정, 조직지도 및 관리권을 행사했다.<sup>57</sup> 국방위원회는 국방(안보)와 내부정치 안정의 우선성, 그에 대한 우선적 자원배분의 원칙을 대내외에 상징하고 지탱했다. 이러한 기능을 배경으로 국방위원회는 특히 국가적 건지의 경제정책설정과 자원배분결정, 그리고 직접 생산에서 매우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 국방위원회의 가장 큰 기능은 자원배분과 생산물 배분에서 국방관련 사업의 우선성, 국방위원회 명령사업의 우선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경제관리에서 내각에 앞서는 권한을 행사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리고 2002년 9월에 제시되었던 ‘국방공업 우선론’이 요구하고 있듯이, 국방위원회 밑에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그 아래 제2경제위원회, 그 아래 내각이라는 식으로 국가기관 위계서열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sup>58</sup> 국방위원회는 민수기업에 직접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국방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내각 산하 임의의 단위를 언제든지 군부기관에 직속시킬 수 있었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내각 민수공장이 군수생산으로 전환되거나, 군부 관리로 이전되었다.<sup>59</sup>

<sup>56</sup> 최주환, “북한군의 외화벌이 실태와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pp. 30-38; 정보사령부, 앞의 책, p. 638.

<sup>57</sup> 장성욱, “북한의 ‘공격우위 신화’와 선군정치: 탈냉전기 군비태세와 군사전략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2009.6), p. 279.

<sup>58</sup> 계명빈,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중),” 『림진강』, 제2호 (2008.3), p. 93.

<sup>59</sup> 김병욱, “북한의 민방위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pp. 201-211.



국방위원회는 계획명령이 아니라 군사명령으로 군수보장 및 경제하부구조 유지에 관여했다. 계획명령의 경우, 국가계획위원회가 기업소에 계획지시를 내리는 한편, 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국방위원회 명령과제에는 자재와 자금의 보장이 존재하지 않았다.<sup>60</sup> 아울러 국방위원회는 개인무장을 한 현역 군인을 연합기업소 등에 파견하여 생산총화에 참여시켰다. 국방위원회 명령을 받은 기업은 자재와 자금을 자체로 마련하여 국방위 과제를 완수해야 했다. 국방위원회 명령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소 지배인이 군사재판에 처해지기 때문에, 지배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국방위 명령과제를 완수해야 했다. 국방위 명령 과제를 받은 기업이 자체로 자금과 자재를 만드는 방법은 대체로 두 가지였다. 첫째, 기업소의 설비와 자재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외부 돈주의 자금을 대부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장생산을 조직하여 추가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국방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국영 자재상사 등에서 준-시장가격으로 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농사지를 농토를 떼어주어 식량 조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국방위원회는 그 중간 과정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그 최종 결과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처럼 국방위원회의 경제 관여는 정책결정의 차원을 넘어 직접 생산을 관장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1997년 말부터 2001년 또는 2002년까지 주요 경제단위에 장령을 전권 대표로 파견했다.<sup>61</sup> 2002년부터는 민생경제 및 경제하부구조와 관련된 경제관리에서 내각의 역할과 시장 활용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2002년 9월 ‘국방공업우선론’을 선포함으로써, 군수부문에 대한 우선적 자원배분을 보장했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현역 장령 파견은 중단되었지만, 판사와 검사를 생산단위에 파견하여 국방위 명령분 이행을 보장하도록 했다.

#### 4. 1990년대 후반 규율 강화와 실리주의 모색의 시초

1997년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하면서, 북한은 전반적으로 체제정

<sup>60</sup> 탈북자 면담 (2009).

<sup>61</sup> 이러한 한 예로써, 1997년 북창화력발전소 재건에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명록이 직접 나섰다. 북창화력은 화력발전 설비용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적 핵심기업이었다. 북창화력의 각 부서와 직장에 장교들이 파견되었다. 이들의 일부는 2000년 10월 경 철수했다(정보사령부, 위의 책, pp. 241-243). 이밖에도 국방위원회는 1998-2000년 사이의 토지정리사업, 1999년 수력발전소 건설사업, 2002년 평양시 현대화 사업에 관여했다.

비에 들어갔다. 경제정책과 관련 북한당국은 두 가지 모순적인 신호를 보내었다. 1998년 헌법 개정과 함께 들어선 새로운 내각은 외견상 자력갱생과 계획경제를 강조하는 등 보수적인 논조를 강화했고 계획경제 체제 재건을 위한 경제관리 체제 재정비 및 계획규율 강화를 추진했다.<sup>62</sup> 그러나 이면에서는 변화된 경제 상황에 새롭게 적응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1996년부터 3대 정책으로 장마당, 폐기발, 가족소유정책이 실시되었다. 1997년부터 농업정책에서 ‘농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 했던 것은 1997년 김정일이 ‘공짜를 없애라’는 선언을 했다는 점이다.<sup>63</sup>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금고에서 ‘혁명자금’을 동원하여 ‘실리주의’ 추구의 모범을 창조하고자 했다.<sup>64</sup> 혁명자금을 대부받은 기업은 이자와 함께 자금을 되갚거나 아니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혁명자금은 여러 공장, 기업소, 과학원, 김책제철소, 발전소, 외화벌이 회사 등에 대부되었다. 이중 대표적인 기업이 만포 다이야 공장이었다. 만포 다이야 공장이 혁명자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김정일은 타이어 수입을 3년 동안 금지시키는 데 동의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만포 다이야 공장은 기술혁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모범을 창조함과 동시에 3년 후 혁명자금을 김정일에게 되갚을 수 있었다. 아울러 1998년부터 북·중 간에 정식으로 민간 무역이 허가되었다.<sup>65</sup> 그 이전까지는 중국 여행자들이 방문기간 소비품인 듯 위장된 상품을 들고 와서 북한 시장에 와서 판매하는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국경을 사이에 둔 양측의 민간 무역업자들이 세관을 통하여 공공연히 상품을 넘기고 넘겨받으면서 서로 장사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1999년에는 다시 한 번 각 군(郡) 자체로 외화벌이를 조직할 것을 명령했고, 7월부터 쌀, 조, 수수 등 곡물과 담배, 채소류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도 장마당 판매를 허용했다.<sup>66</sup>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경제전문가로 이루어진 시장경제 고찰단이 중국에 파견되었다.<sup>67</sup> 이들은 2002년 7월 조치를 기안하는 데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

## 5. 시장 확대가 정권에 제기한 대한 도전과 대응

<sup>62</sup>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pp. 164-169;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pp. 38-40.

<sup>63</sup> 립근오, “2000년 해산 비사검열과 그 잘못,” p. 9.

<sup>64</sup> 탈북자 면담 (2009)

<sup>65</sup> 립근오, “2000년 해산 비사검열과 그 잘못,” p. 21.

<sup>66</sup>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p. 168.

<sup>67</sup> 립근오, “경제주기성의 파탄가 ‘시장화’ - 조중무역,” 『임진강』, 10호 (2010), p. 79.

1990년대 초반 이후 급속히 확대한 계획외적 경제활동은 북한당국은 많은 도전을 제기하였다. 첫째, 계획경제와 당기구를 통한 권력 상승의 하부 기관, 하부 요원 그리고 일반주민에 대한 장악 능력이 현저히 저하했다. 둘째, 간부부패와 국가 재산에 대한 절도와 횡령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셋째, 빈부격차와 지역격차가 발생했다. 넷째, 범죄의 증가, 가족 해체 등 국가와 사회 전반에서 정치 사회적 기강이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sup>68</sup>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북한당국은 다면적 차원에서 대응했다. 첫째, 장마당의 주기적 억제와 이완, 그리고 무역회사의 주기적 통폐합이 있었다. 1996년 무역회사 및 외화벌이 개인들에 대한 집중 검열이 있었다.<sup>69</sup> 대폭적인 무역회사 정리 조치가 취해지는 가운데 주요한 군부 무역회사 몇 개가 해체되었다.<sup>70</sup> 그 계기는 6군단의 지휘부가 중국과 아편을 밀매하고 뒷돈을 챙기며, 술자리에서 불평과 비판을 하다가 적발되어 군단이 해체되고 지도부가 숙청당한 사건이었다.<sup>71</sup> 1999년 2월 당국은 북한 전역의 장마당을 폐쇄하고 장사 활동자들에게 원래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sup>72</sup>

둘째, 본보기적인 국가폭력 행사가 있었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그 하나는 특정 기관과 지역에 대한 간헐적인 본보기적 국가폭력행사와 공개처형과 같은 보다 항시적인 본보기 국가 폭력 행사가 있었다. 기관 및 지역에 대한 본보기적 폭력행사에서 대표적인 것은 첫째, 앞서 지적한 1996년 6군단 해체, 둘째, 1998년 보위사령부의 황해제철소 노동자 시위 진압, 셋째, 2000년 보위사령부의 혜산의 당-정 기구 해체 사건이다. 둘째 사건을 보자. 황해제철소의 지배인과 당비서는 종업원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무단으로 생산된 압연강재를 중국에 수출하여 옥수수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것이 보위사령부에 발각되어 중앙당 후보 위원이기도 한 지배인과 당비서를 비롯하여 8명이 공개 총살당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항의시위를 벌였고, 보위사령부가 이를 무력으로 유혈 진압했다.<sup>73</sup> 세 번째의 혜산사건을 보자.<sup>74</sup> 중국과 국경도시인 혜산은 2000년 당시 신의주와 함께

<sup>68</sup>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 pp. 141-153.

<sup>69</sup>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 304.

<sup>70</sup>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p. 127.

<sup>71</sup> 호혜일, 『북한요지경』 (맑은소리, 2006), pp. 194-198; 최주환, “북한군의 후발사업이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1권 2호, p. 54.

<sup>72</sup>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p. 168.

<sup>73</sup> 주성하, “직접 목격한 북한 노동자 폭동, 탱크로 밀어버린 현장은…,” 『동아일보』, 2011년 1월 21일.

북한에서 시장이 가장 발달되고 생활수준이 높은 도시였다. 김정일은 “혜산이 자본주의화 되었다”는 구실로 2000년 3월부터 6월까지 비사회주의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보위사령부가 혜산의 당, 정권, 사법기관을 타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지방 간부를 포함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도당 조직비서와 도보위부 책임비서와 주요 지방 간부들을 포함하여 열댓 명이 공개총살 당하였다. 이것이 한국 언론 등에서 문제가 되자 김정일은 역으로 보위사의 혜산 공격에 참여했던 책임자들의 일부를 처단했다. 다음으로 공개처형을 보자. 공개처형은 전선 절도, 염소절도 등 상당부분 사소한 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했다.<sup>75</sup> 빈도수는 1990년대 초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5년이 되면 122회로 전년도의 2.5배로 증가하며, 1996년에는 227회로 다시 1.9배가 증가하고, 1997년에 229회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1998년 151회로 0.7배로 감소하고, 1999년 93회로 0.6배로, 2000년에는 90회, 2001년은 42회로 다시 감소한다.<sup>76</sup> 이후 2000년대에는 대체로 약간 줄어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셋째, 정규적 대응 체계의 강화이다. 인민보안부, 국가보위부, 보안사령부 등 각종 공안 기관의 강화와 형법 및 형벌 체계 개선이 이에 속했다. 넷째,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빠의 파견과 같이 비상설적인 수단을 신설했다. 원래 북한에서는 당기구가 주도하는 당생활을 통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사업에 범죄나 일탈을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당기구의 정치적·사상적 사업이 제구실을 할 수 없게 되자, 상설적인 각종 공안기구를 강화시킴과 함께 비상설적인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빠를 조직했다. 이 그루빠는 보통 당기관, 각종 공안기관의 연합체로 이루어져 상호 담합이 어렵도록 조직되어 주로 지방과 하부 단위에서 발생하는 당과 정 및 돈주와의 결탁과 결합을 타격 대상으로 했다. 비사회주의 투쟁은 1992~1993년에도 조직되어 공장기업소에 만연하는 생산물 횡령을 단속했다.<sup>77</sup> 1997년 김정일이 “사상교양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선언하면서, 비사투쟁은 본격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보위사령부의 혜산의 지방 당 정기관에 대한 타격이었다. 이후 2000년대 중후반 들어 비사그루빠의 파견은 중앙의 지방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sup>74</sup> 림근오, “2000년 혜산 비사검열과 그 잘못,” pp. 8-47.

<sup>75</sup> 통일연구원, 『2009 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9), pp. 45-58.

<sup>76</sup> 북한인권정보센터 제공 자료 (2010.8.24).

<sup>77</sup>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pp. 152-153.

## IV. 결론

1990년대 시장이 확대하게 된 주요 추동력은 북한 정권의 당, 군, 정 의 각종 기관 및 간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을 활용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시장 확대는 정치적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 정치적 자본주의는 이윤을 창출하는 특권적 기회를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 활동을 의미한다. 정치적 자본주의에서는 상업적 활동을 통해 이윤을 내고 자본축적을 하자면, 정권 또는 국가기구와 결탁하면서, 그것이 제공하는 특혜와 보호를 활용해야 한다. 정권은 상업적 활동과 관련한 특혜와 보호를 정권 유지에 긴요한 기관과 협조적인 세력에게 정치적으로 배분한다. 또한 정치적 자본주의에는 확립된 소유권, 계약준수보장, 정부정책의 안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정치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해 기업가는 권력과의 결탁, 관료적 후견망의 확충으로 대처한다.

북한에서 이러한 특혜와 보호를 누리는 상업적 행위자는 당-군-정의 각종 기관이 자체예산 충당을 위해 운영하는 외화벌이 무역회사들이었다. 1990년대 초반 정권의 재정난 때문에 이와 같은 각종 기관 외화벌이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었다. 1995년 이후 선군정치가 시작된 이후에는 여러 정권 기관 중에서도 군부에 소속된 외화벌이 사업 단위가 상업적 활동에 관한 가장 강력한 특혜와 보호를 누리게 되었다. 이 시기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와 무역은 군부의 생존을 위해 군부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시장의 개인상인과 군부는 상호 공생했다. 군부는 개인상인의 상업 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후원과 보호를 제공했으며, 개인상인은 군부에게 안정적 수입을 제공했다. 1998년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회는 자재와 자금을 보장하지 않은 채 군사명령으로 기업에게 계획수행을 요구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북한의 시장전개에서 주역은 “자연발생적인 상거래와 개인 생산에 종사하는 (일반) 주민”이 아니라, 정권 기관들 및 정권과 결탁한 개인 상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시장 전개과정에서 시장 지배자적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를 토대로 주민의 생계적 시장 활동을 직접 지배하여 활용하거나, 포섭하여 하부 구성요소로 종사시켰다.

끝으로 시장 확대는 북한 정권에게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도전을 제기했다. 이에 대응하여 정권은 장마당의 주기적 억제와 이완, 그리고 무역회사의 주기적 통제합을 반복해왔다. 또한 정규 공안체계와 형벌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비사그루

빠와 같은 임시적 기구를 확충했다. 아울러 공개총살 및 지역 당-정기구의 해체와 같은 본보기적 폭력으로 대응했다.

■ 접수: 5월 20일 ■ 심사: 6월 6일 ■ 채택: 6월 13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고일동. 『북한의 재정위기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권 혁. 『고난의 강행군: 98년 가을 - 99년 봄 30살 청년의 북한답사기』. 서울: 정토출판 1999.
- 대한무역진흥공사. 『북한의 무역제도 및 상사디렉토리』. 서울: 대한무역진흥공사. 1994.
-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추이』. 서울: 한국은행. 2004.
- 박형중.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1998.
- \_\_\_\_\_.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 박형중 외.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박형중·최진욱. 『최고인민회의 11기 3차 회의 결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파주: 한울. 2010.
- 윤영관·양운철 편.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와 사회』. 파주: 한울. 2009.
- 이석·김창욱·양문수·이석기·김은영.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북한의 경제개혁과 체제변화 전망』.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정보사령부. 『북한조직편람』. 2004.
- 정영철·고성호·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 2005.
- 좋은벗들 엮음.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 서울: 정토출판. 2000.
- 주성하. 『주성하 기자의 북한 바로보기』. 서울: 경천. 2010.
-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6.
- 통일연구원. 『2009 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호혜일. 『북한요지경』. 서울: 맑은소리. 2006.

Andreski, Stanislav. *Max Weber on Capitalism, Bureaucracy and Religion*. London: Routledge, 2006.

Chehabi, H.E. and Juan J. Linz. eds. *Sultanistic Regimes*. Baltimore: The Johns

- Hopkins University Press, 1998.
- Haggard, Stephan·Noland, Marcus. *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11.
- Hutchcroft, Paul D. *Booty Capitalism: The Politics of Banking in the Philippin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 Johnston, Michael. *Syndromes of Corruption: Wealth, Power, and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Olson, Mancur. *Power and Prosperity: Outgrowing Communist and Capitalist Dictatorship*. New York: Basic Books, 2000.
- Scott, James C. *Comparative Political Corruption*. Englewood Cliffs: 1972.

KOTRA 북한팀. 『2003년도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KOTRA, 2004.  
 KOTRA. 『2007년의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 2008.

## 2. 논문

- 김병욱. “북한의 민방위력 중심 지역방위체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 김영운. “북한에너지난의 실상과 전망.”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 1992.
-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2005년 하반기호.
- 장성욱. “북한의 ‘공격우위 신화’와 선군정치: 탈냉전기 군비태세와 군사전략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2009.6.
- 정은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체제적응력.” 『통일과 평화』. 창간호, 2009.
-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통일문제연구』. 2009년 하반기, 통권52호.
- 최봉대·구갑우. “북한 도시 ‘농민시장’ 형성 과정의 이행론적 함의: 1950-1980년대 신의주, 청진, 혜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6권 2호.
- 최주환. “북한군의 후방사업이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1권 2호.
- \_\_\_\_\_. “북한군의 외화벌이 실태와 전투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조사연구』. 2권 2호.
- 홍 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황덕남. “북한 연변 변경무역의 활성화에 대하여.” 『통일문제연구』. 2000년 하반기호 (통권 34호).
- Bruun, Ole, “Political Hierarchy and Private Entrepreneurship in a Chinese Neighborhood.” Andrew G. Walder eds. *The Waning of the Communist State: Economic Origins of Political Decline in China and Hunga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5.
- Buhr, Daniel. “Varieties of (Incorporated) Capitalism: Conceptualizing Governance

and State-Business Relations in Autocracies.” *Paper presented at IPSA-ECPR Conference*. Sao Paulo, February 19, 2011.

Callaghy, Thomas M. “The State and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Africa: Theoretical, Historical and Comparative Reflections.” Donald Rotchild and Naomi Chazan eds. *The Precarious Balance: State-Society Relations in Africa*. Boulder: Westview Press, 1988.

Oliver Schlumberger. “Patrimonial Capitalism: Economic Reform and Economic Order in the Arab World.” Eberhard-Karls University Ph.D. theses, 2004.

Sonin, Konstanin. “Why the Rich May Favor Poor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William Davidson Working Paper*. Number 544, December 2002.

Wank, David L. “Private Business, Bureaucracy, and Political Alliance in a Chinese City.”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Nr. 33, January 1955.

### 3. 기타자료

계명빈,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중).” 『임진강』. 제2호, 2008.

김정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하신 말씀.”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6돌 즈음 담화 (1996.12.7). 『월간조선』. 4월호, 1997.

림근오. “2000년 해산 비사검열과 그 잘못.” 『임진강』. 7호, 2010.

\_\_\_\_\_. “경제주기성의 파탄가 ‘시장화’ - 조중무역.” 『임진강』. 10호, 2010.

\_\_\_\_\_. “조선의 시장화와 비정상화, 주민생활 변화.” 『임진강』. 8호, 2010.

주성하. “직접 목격한 북한 노동자 폭동, 탱크로 밀어버린 현장은…” 『동아일보』. 2011년 1월 21일.

채 순. “개인소유의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왔나?” 『임진강』, 2010년 9호.

<<http://www.bok.or.kr>>



Abstract

## Commercial Engagements of the Party-State Agencies and the Expansion of Market in the 1990s in North Korea

*Hyeong-Jung Park*

During the market expansion in the 1990s, commercial activities of party-state organizations played the dominant roles. This kind of market expansion can be analyzed through the concept of politically oriented capitalism. This means that, whatever particular form it takes, the state grants privileged opportunities for profit. In the 1990s, confronted with drastic deterioration of financial situation, North Korean regime allowed or promoted for its subsidiary party-state agencies to engage in foreign currency earning and other types of commercial activities for financial self-support. On their part, the party-state agencies took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and actively took part in commercial activities. The party-state officials also manipulated their host agencies commercial activities for personal enrichment thorough corruption. The military profited most from commercial activities. The start of the ‘military first politics’ in 1995 coincided with rapid market expansion. The ‘military first politics’ legitimized for the military to play the privileged role in the market expansion.

**Key Words:** Political Capitalism, Marketization, the Military First Politics, Foreign Currency Earning, Trading Company